

文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해 46.4%

부정평가 50.1%...공·부정차 1주 만에 오차 범위 안
지지도, 20대 4.0%p 올라... '秋 장관 아들' 해명 영향
민주당 지지도 3주 만에 ↑ 35.2%...국민의힘 29.3%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9월3주차(14일~18일) 주중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0.8%포인트 오른 46.4%(매우 좋음 26.5%, 잘하는 편 19.8%)를 기록했다. 8월4주 이후 하향세였던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도 0.1%포인트 상승해 50.1%(매우 잘못된 35.2%, 잘못하는 편 14.9%)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모름·무응답'은 0.7%포인트 감소한 3.6%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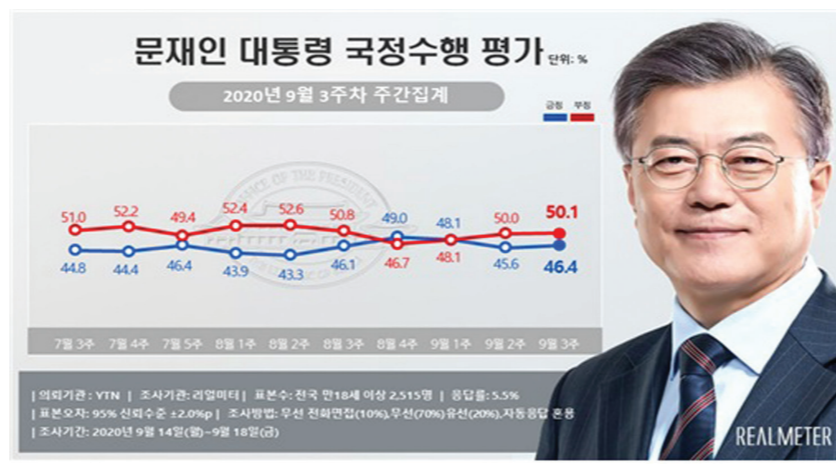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7%포인트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위 안으로 소폭 좁혀졌다.

연령별로는 20대(4.0%p ↑, 36.6%→40.6%, 부정평가 53.1%)에서 지지도 상승폭이 컸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아들 군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8.0%p ↑, 37.8%→45.8%, 부정평가 51.6%)에서, 지지 정당별로 무당층(4.1%p ↑, 24.5%→28.6%, 부정평가 60.2%)에서, 직업별로 농업(5.0%p ↑, 38.8%→43.8%, 부정평가 56.2%)에서 지지도가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9.4%p ↓, 49.1%→39.7%, 부정평가 56.2%), 경기·인천(4.7%p ↓, 49.0%→44.3%,



부정평가 52.4%), 국민의당 지지층(6.2%p ↓, 19.9%→13.7%, 부정평가 83.7%), 정의당 지지층(4.1%p ↓, 41.6%→37.5%, 부정평가 56.3%), 보수층(5.6%p ↓, 26.7%→21.1%, 부정평가 77.5%)에서는 지지도가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5.2%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지지도와 같이 3주 만의 반등이다.

국민의힘은 3.4%포인트 내린 29.3%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6.2%(1.8%p ↑), 열린민주당 5.9%(0.7%p ↓), 정

의당 5.3%(0.3%p ↑), 기본소득당 1.1%(0.1%p ↓), 시대전환 0.8%(0.2%p ↑), 기타정당 2.5%(0.6%p ↑), 무당층 13.7%(0.5%p ↓)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4만6014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5명 응답을 완료해 5.5%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국민의힘, '추미애 때리기' 역풍?...10주 만에 20%대로 하락

민주당과 5.9%p 격차...PK·TK, 20대·자영업자 모두 하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과 정치자금법 의혹 등을 연일 쟁점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론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은 모양새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9월3주차(14일~18일) 주중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내린 29.3%로 10주 만에 20%대를 하락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5.2%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5.9%포인트로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다시 벌어진 모습이다.

국민의힘 응답자의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40.2%→35.0%로 전주대비 5.2%포인트가 하락했다. 서울은 4.9%포인트, 대구·경북은 4.5%포인트가 각각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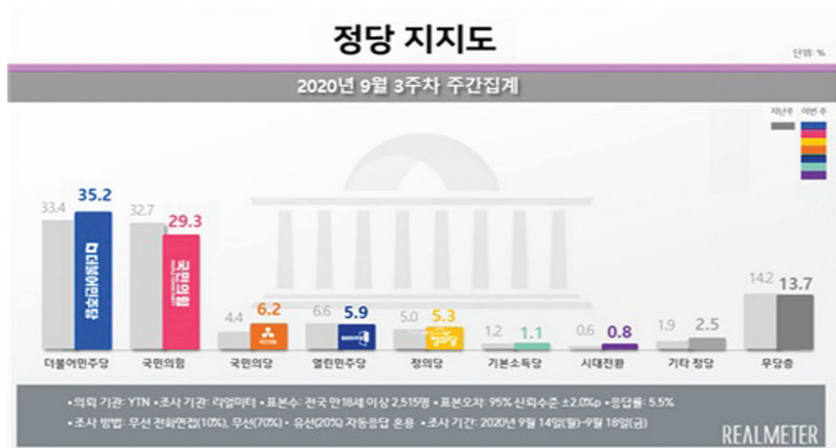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병역문제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가장 큰 20대가 34.9%→27.5%로 무려 7.4%포인트가 빠져나갔다. 40대는 4.8%포인트, 70대 이상 3.6%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 정치적 지지가 바뀌는 스윙층 변화가 눈에 띄었다. '잘모른다'고 응답한 층은 29.2%→21.5%로 7.7%포인트가 하락했다. 중도층은 37.2%→33.3%로 3.9%포인트가 내려갔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40.6%→33.0%로 7.6%포인트, 학생이 31.1%→25.6%로 5.5%포인트가 하락한 모습이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2주차 조사에서 36.3%로 탄핵정국 이후 민주당(34.8%)에 첫 역전했지만, 그 뒤 2주 연속 하락해 8월4주차 30.1%를 기록했다.

이후 추 장관 아들 군 복무시절 병



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9월1주차 31.0%, 9월2주차 32.7%로 다시 반등했으나 이번주 29.3%로 내려앉았다.

리얼미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지난주 대정부질문 등에서 야당이 민생보다는 '추미애 법무 장관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싸고 여당이 잇따른 실언으로 설화에 휘말렸고 통

신비 일괄지원, 전 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 등 현안이 있었지만, 이른바 '야당의 시간' 속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전략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김홍걸 의원 제명 등 초강수를 뒀음에도 야당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있는 조순진 의원이나 피감기관 수주 의혹이 있는 박덕흠 의원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

최초 ROTC 출신 육참총장 발탁 육군사관학교 독식 체제 깨졌다

“오로지 능력·인품 중점”

정부가 21일 학군(ROTC) 출신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을 신임 육군 참모총장으로 발탁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육군사관학교 독식 체제가 깨지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인사 발표 보도자료에서 “서열과 기수, 출신 등에서 탈피해 오로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며 “장군 이래 최초로 학군장과 출신인 남영신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69년 육사 1기인 서종철 제19대 참모총장 이후 50년 만에 ‘육사 출신 대물림’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육군 참모총장뿐만이 아니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육사 출신들은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이르는 32년의 군사통치 기간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을 지내며 권세를 쥐었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으로 끝나는 듯했던 ‘육사 전성시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다시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육사 25기), 김장수(27기), 박흥렬(28기), 김관진(28기), 한민구(31기) 등 육사 출신들만 국방 요직에 배치했다.

이렇다보니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로선 육사 배제를 정책 기조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현 정부의 군 인사를 거치면서 육군 내 육사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학군 21기)과 육군3사관학교 출신 황인권 2작전사령관(3사 20기)이 대장을 맡았다. 또 이번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육사가 모두 배제된 송영무(해사 27기)-정경두(공사 30기), 정경두-박한기

로 짜여졌다. 그럼에도 육사는 육군 참모총장 자리만을 내주지 않았다. 육군 내부 인사권을 쥐는 참모총장만은 내줄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돼있었기 때문이다. 비육사 육군 참모총



남영신 신임 참모총장

장이 탄생하면 육군 인사 행정 체계 등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육사 출신들의 인

사 상 불이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4월 육군 참모총장에 비육사 출신을 앉히려 했지만 결국 서육 현 국방장관을 참모총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군 내부에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공군, 학군단 출신인 상황에서 육군 참모총장마저 비육사 출신을 임명하면 군 조직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 의견이 많았다.

그렇던 청와대는 이번에는 육사의 육군 참모총장 독점을 끝냈다. 육사 출신인 서육 육군 참모총장을 국방장관으로 발탁하는 대신 참모총장 자리를 비육사에게 내주는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다른 요직에 육사 출신을 앉힌 점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육사43기 안준석, 2작전사령관에 육사42기인 김정수를 배치했다.

이 같은 큰 흐름 외에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내정자의 존재감 자체도 무시할 수는 없다.

남 내정자는 학군23기 출신으로 3사단장 역임 이후 장군 이래 최초의 비육사 출신 특수전사령관을 지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 육군기무사령관에 임명되면서

충돌직접 진압 계엄령 문건 의혹에 휘말린 기무사를 개혁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그는 기무사 해편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재창설을 주도한 공로로 대장 진급에도 성공했다. 나아가 육군 1야전사령부와 3야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의 2대 사령관이 되는 등 현 정부의 총아로 떠올랐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